

# 부처 업무보고, 이번주도 계속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몰라”

지난주부터 시작된 부처별 대통령 업무 보고가 이번 주에도 계속 이어지면서 공식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12·3 비상계엄 가담 공무원 조사와 일부 부처의 장·차관 면직 및 사퇴로 내부 분위기가 뒤숭숭한 가운데, 사상 첫 생중계 속에서 대통령의 ‘송곳 질문’에 대비해 어느 때보다 업무보고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부터 시작으로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한 데 이어 이번 주에도 나머지 부처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19부·5처·18청·7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이 대상이며, 각 부처 장·차관은 물론 실·국장 등 실무자도 참석한다. 통상 업무보고는 연초에 이뤄지지만, 새 정부 업무보고는 이례적으로 연말에 잡혔다. 일단 ‘선발대’로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들 사이에서는 ‘큰 산을 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보고였던 데다 어떤 식으로 보고가 진행되는지 다른 부처의 형식도 참고할 수 없어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한 실장급 공무원은 “그간의 업무보고는 진행 순서 등 어느 정도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없었다”며 “딱 장관 업무보고 이후 토론”이었던 것만 있었다. 그래서 무슨 질문을 누구에게 할지 전혀 감을 잡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통령은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보고서를 꼼꼼히 살피고 질문할 내용을 체크한 뒤 장·차관뿐 아니라 외청, 산하 기관장, 실·국장들을 향해 날카롭고 구체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특히 외교·안보 등 민감한 사안을 제외한 모든 업무보고 과정이 전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점도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업무보고가 녹화 방송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경제 부처에 한해 생중계된 적은 있지만, 모든 부처에 대한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정 운영 방향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희망찬 농업·농촌,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李대통령, 지난주 기재부 등 이어 업무보고 계속 보고 마친 부처들 ‘큰 산 넘었다’… 생중계 부담도 보고 앞둔 부처는 ‘열공’ 중… “수치·통계 등 살피”

업무보고를 마친 부처 중에서도 ‘부담권한 행사’ 등으로 차관이 직권 면직돼 내부가 크게 술렁였던 농식품부는 장관이 안정적으로 보고에 임하며 한시름 놓았다는 분위기가...

농식품부의 한 과장은 “업무보고 때문에 다들 준비도 열심히 하고 긴장도 많이 했는데, 대통령께서 여러 정책에 힘을 실어주시고 걱정했던 포인트들에도 나름 답변과 보고가 잘 된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업무보고를 앞둔 부처들은 보고를 마친 다른 부처들의 생중계 영상을 참고하며 ‘열공 모드’ 중이다.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생중계를 보면서 긴장하고 있다”며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장·차관뿐 아니라 실·국장도 답변할 수 있는 만큼 디테일한 수치나 통

계 등과 관련해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는 분위기가 크다”고 전했다.

또다른 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도 “전 국민에게 다 공개되고, 대통령께서 질문하신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많다”며 “기본 통계나 주요 정책과 관련해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을 정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부처에서 대통령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해 공개적으로 질타를 받은 모습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화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보고서에) 쓰인 것 말고는 아는 게 하나도 없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 능하나, 안 하나 묻는데 왜 자꾸 옆으로 새 나”라며 강하게 질책했다.

업무와 관련해 인력과 법률적 문제를 거론한 이명구 관세청장을 향해서는 “내

가 이 얘기를 한 지가 몇 달이 됐는데” “인력이 없어 필요한 일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통일교 금융 수수’ 의혹으로 장관이 사퇴한 해양수산부는 혼란스러운 내부 상황을 최대한 수습하면서 업무보고 준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업무보고는 일단 차관이 진행할 예정”이라며 “갑작스런 장관 사퇴와 부산 이전이 맞물리면서 혼란스러운 시기이지만, 차관의 업무 스타일이 워낙 꼼꼼해 차관을 중심으로 업무보고를 잘 준비해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질책과 함께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면서 공식사회 기강을 바로 잡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의 압도적 다수는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고 자기 일을 잘한다. 그래서 성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다만 극히 소수가 연못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미꾸라지처럼 물을 흐리는 것인데, 이는 정갈 소수”라고 밝혔다. /뉴스1

## 농어촌 기본소득 벌써부터 ‘뼈격’ 송미령, 농정 리더십 본격 시험대

도비 분담·재공모 논란·계통 포화까지 대통령 공약 추진 속 현장 갈등 ‘칩칩산중’ 농협·농지·재생에너지 개혁 병행 과제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정 대전환 실행의 핵심 공약인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지자체 분담 논란, 재공모 가능성, 태양광 갈등 등이 겹치며 연이후 최대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송미령 장관은 지난 11일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에서 지난 정부의 농촌소멸 대응책에 대해 “그동안 인프라 설치에 주력했지만 농촌소멸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며 기존 농정의 한계를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이어 “농촌 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 그 중 하나가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농정 대전환의 마중물”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시행도 되기 전 지방분담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농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도비 30%를 부담하지 못하면 재공모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송 장관은 이에 대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절반 이상의 도는 협조 의사를 밝혔다”라고 답변했다. 그는 “나머지 도도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며 “협조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첫 해부터 재정 갈등이 부각되면서 사업 추진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공모를 통과한 지자체까지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중앙-지방 간 협의가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되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도 송 장관의 주요 과제다. 정부는 당초 2030년까지 500개 소 소성을 목표로 했지만 이 대통령은 “목표가 너무 적다. 더 적극적으로 늘리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송 장관은 계통(전력망) 부족을 가장 큰 과제로 지목했다. 그는 “사실 수요 조사도 해봐야 하고 가능성 여부를 많이 타진해 봐야 한다”며 “확대를 하려고 해도 계통 문제라서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까지도 고려하고 있지만 사실 기후에너지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기후부와 의논해서 최대한 확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확대 요구와 현장의 제약 조건이 충돌하는 구조 속에서 햇빛소득 사업 역시 송 장관의 정책 조율 능력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아울러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내놓은 새 농정 청사진은 농촌을 ‘국가 돌봄·생활 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왕진버스·이동장터 등 찾아가는 서비스, 치유농업 산업화, 폭염 취약계층 지원, 청년 농업인 정착 지원, AI·기계화 기반 생산성 향상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이들 과제는 부처 간 조정, 지자체 역할 분담, 인력 확보 등 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 농촌을 생활·돌봄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향 자체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만 실행 과정에서의 충돌과 조율이 송 장관의 리더십을 가르는 핵심 요소로 남게 됐다.

농협 개혁과 농지제도 개선, 재생에너지 등 3대 개혁 역시 모두 정치적·행정적 부담이 큰 사안이다. 농협 개혁은 조합장 권한·자금·인사 투명성 등 민감한 구조 조정을 요구한다.

송 장관은 “농협은 현재 특별감사를 하고 있고 익명제보센터 통해서 많은 의견도 주고 있어 감사 결과를 볼 것”이라며 “추가적으로 해야 될 조치들이 있으면 입법도 필요하면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추가 입법을 하고 원칙에 준하는 필요한 개혁 조치들을 하겠다”고 말했다.

농지제도 개선 역시 규제 완화 요구, 식량안보 차원의 규제 강화 요구가 정면 충돌하는 영역이다. 재생에너지는 농지 잠식 우려, 계통 포화 문제, 주민 수용성 등 난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

결국 대통령 공약의 실행을 총괄해야 하는 동시에 현장의 불확실성과 갈등을 조율해야 하는 상황에서 송 장관의 정책 추진력과 협상력이 올해 농정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뉴스1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인 ‘기본사회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담은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사회위원회는 모든 사람에게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생활과 다양한 기회를 누리게 하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여러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을 총괄·조정·지원하는 정책 컨트롤

### “국민 최소한의 삶 보장”... 대통령 소속 ‘기본사회위원회’ 만든다

#### 행안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타이다. 행안부는 지난 6월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단계부터 기본사회 정책의 주무처로서 기본사회 추진체계 마련을 담당하면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제정안을 마련했다.

제정안에는 기본사회위원회 목적과 기능, 위원 구성, 위원회 조직 및 운영 방식 등이 규정돼 있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국가비전 및 기본방향 설정,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등

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위원장은 대통령, 부위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 위촉위원 1명이다. 위원은 관계 부처 장관, 지방 4대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 18명과 기본사회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위촉위원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된다.

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건을 사전에 검토·조정하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뉴스1

**김**      **전복**      **대파**      **울금**

# 농수산물은 진도것이 최고지라~

진도아리랑      검색      진도아리랑      청정 농수산물 공동브랜드